

심 사 보 고 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1
----------	-----

2022. 4. 19.(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노금식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4월 19일

-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금식 의원)

가. 제안사유

- 충북도민들은 충북지역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사건, 소년보호 사건, 가정폭력사건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정법원의 전국적인 확대 설치 기조에도 불구하고 광역도 중 충북, 전북, 강원, 제주도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음.
- 청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접수 및 처리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방법원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은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되며, 지방법원 관할인구가 오히려 적은 울산에는 이미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2.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가정법원은 1963. 10. 1. 최초로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 가사(이혼, 양육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년 가정보호, 아동보호, 성매매 보호, 가족관계등록비송 등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함께 발휘되는 영역으로서 일반법원의 민사소송과는 다르며, 단순히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필요함
- 헌법 제27조에서도 국민은 어떤 사건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법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충청북도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지방법원이 있는 도 단위 지역에서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4곳만이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청주지방법원 보다 관할인구 수가 13만여명이 적고, 연간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 접수 건수에도 청주지방법원보다 1,189건이 적은 울산은 이미 2018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가사과가 최초로 설치되었던 수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었고, 세번째로 가사과 설치되었던 창원은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예정이나,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사과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음
- 가정법원의 전국적 확대 기조와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 인구 수 및 가사소년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적은 곳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다는 것, 가사과 설치로 가정법원의 유치를 위한 실무적 준비가 되어있고,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 정당한 사법서비스 제공 받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기 건의문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전국 가정법원 설치 현황」
- 「2021년 가사 및 소년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 비교」
-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참고자료

1. 전국 가정법원 설치 현황(2023년 3월 현재)

개원시기	설치 법원
1963. 10.	서울가정법원
2011. 04.	부산가정법원
2012. 03.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2016. 03.	인천가정법원
2018. 03	울산가정법원
2019. 03.	수원가정법원
2025. 03.(예정)	창원가정법원

2. 2021년 가사 및 소년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 비교

가. 청주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비교

구분		가사 소송	가사 조정	가사 비송	소년 보호	가정 보호	가족관계 등록비송	합계
접수	청주지방법원	1,239	147	2,851	1,111	561	9,173	15,082
	울산가정법원	1,345	81	2,332	1,314	630	8,191	13,893
처리	청주지방법원	1,238	135	2,860	1,133	504	9,075	14,945
	울산가정법원	1,346	90	2,142	1,133	461	8,099	13,271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헌법 제27조는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떤 사건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법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함께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분쟁 해결은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청북도 도민들은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정법원의 설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서울, 부산 등 8곳의 가정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더욱이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도 단위 지역은 충북을 포함하여 전북, 강원, 제주도 단 4곳 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는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사과가 설치되어 가사 및 소년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사과는 가정법원의 전 단계로서, 전국 최초로 가사과가 설치되었던 수원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 오히려 세 번째로 설치된 창원 경우에는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가사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미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 인구는 146만명이며, 청주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는 159만여명으로 13만여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연간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 접수 건수를 보더라도, 청주지방법원의 접수 건수는 2021년 기준 15,082건으로 울산지방법원의 13,893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지방법원은 별도의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사과의 역량만으로는 가정 및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사법절차 내에서 가정 및 청소년을 위한 후견·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 인구가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으며, 청주지방법원보다 가사 및 청소년 관련 사건이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을 164만 충북도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고 있는 164만 충청도민을 대표하여, 충청도민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있어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건의합니다.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적극 노력하라!

2023년 4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